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5. 16.(수) / 총 3매 (본문 3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원만, 사무관 서정석 • ☎ (044) 201-4307, 4253
	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		• 과장 박종원, 사무관 김태우 • ☎ (044) 203-4320, 4326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		• 과장 김민표, 사무관 양민영 • ☎ (02) 2110-2380, 2387
보 도 일 시		2018년 5월 17일(목) 14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민 곁으로 날아간 드론, 혁신성장 성과 체감도 높여 17일 「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」서 드론산업 육성성과 발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백운규),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)는 마곡 R&D 단지(서울 강서구)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「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」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성과를 발표했다.
 - 이날 보고대회는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대한 성과를 시연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.
 -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3차원 공간정보 구축, 시설물 점검, 대기환경 모니터링 등 드론 시연을 참관하고 드론산업 육성 성과를 보고받았다.
 - 첫 번째로 이륙한 고정익 드론은 미리 입력된 경로를 따라 약 3분간 마곡지구 일대(약 300m)를 연속 촬영하면서 획득한 사진을 이용해 스마트 입체도시 모델을 구현*했으며,
 - 이어서 출발한 회전익 드론은 건축물 주변을 비행하면서 광학·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건축물 외벽 균열 여부를 확인했다.
- * 드론영상을 활용한 3D 모델링 구현 시 기존 항공기 촬영 대비 해상도 10배, 위치·사물 정확도 3배, 소요시간은 절반 수준으로 단축 가능

○ 마지막으로 대기환경 측정 드론이 비행하면서 미세먼지, 유해가스 (일산화탄소 등)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했다.

* 고도 2.5km까지 상승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회전익 드론

< 드론 시연영상 >



스마트 입체도시 모델링 건축·시설물 외벽 점검 대기환경 모니터링

□ 정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수요 발굴, 시범·실증 지원 및 규제혁신 등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 중에 있다.

○ 우선, 초기 제작수요 창출과 드론활용 모델 발굴을 위해 '21년까지 약 4,000여대(現 800여대 수준)의 드론이 국토교통·경찰·산림·설비·전력설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.

* 국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한 제품 지정('18.2) 및 공공기관이 수요를 제시하는 경우 R&D지원 후 조달로 연계하는 공공혁신조달 추진

- 공공분야에서는 LX가 국·공유지 점유현황 조사, 기반시설 점검 등 국토조사와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, 민간분야와 협력하여 해외진출도 하는 등 우수사례를 선보이고 있다.

* 우루과이 지적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통해 지적도면 정확도 대폭 향상, 인근 국가에 우수사례로 소개

- 산림청은 산불예방 등에 드론을 도입하여 조사시간을 약 1/10으로 단축했고,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사업소별로 드론운용시스템을 확대하여 설비점검(철탑기준 약 83% 비용절감)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.

- 또한, LH는 215개 사업지구에서 계획부터 시공, 유지·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드론을 도입(年 250억 시장창출) 중이며, 국토지리정보원은 드론 공공측량을 위한 인정 근거를 마련('18. 3.)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.

- 공공분야의 선도적인 활용을 기반으로 민간분야에서는 물류용으로 우편배송과 해상선박 물품배송에, 농업용으로 기존 농약살포 업무에서 인공수분 및 광대역 배추 생산·출하량 조사 등에 확대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곧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민간업체가 보유한 우수기술을 자유로운 시험·실증을 통해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착수하고, 안전·통제·시험·정비 등 전문시설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(18.5, 3개소 공사 착수)하고 있다.
- 드론 스타트업에 대한 인증·특허,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(판교·대구·부산)도 운용 중이다.
- 아울러, 야간·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제 도입(17.11), 긴급 드론 운영기관 특례 적용(17.11) 등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했다.
-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국내 시장은 급속히 성장 중이다. 전년 연말대비 '18.3월에 기체신고 대수는 17%(3,849→4,514대), 사용사업체는 10%(1,501→1,641개), 자격증명자 수(4,254→5,777명)는 36%가 증가했다.
- 특히, 드론 제작·운용 등 관련분야에서 작년에만 약 1,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.
- 정부는 향후 드론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지원허브를 추가로 구축하고, 다수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시대에 대비하여 원격·자율비행을 지원하는 미래형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(K드론 시스템)도 개발(~'21)해 나갈 계획이다.

 <p>OPEN 중재서비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서정석 사무관(☎ 044-201-4253),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김태우 사무관(☎ 044-203-4326)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양민영 사무관(☎ 02-2110-238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